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 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지역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주제어: 6자회담, PSI, 억지전략, 균형전략, BDA, 북핵문제

*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sangsoon3@gmail.com

I. 서론

북한의 무핵화 농축프로그램 인정으로 시작된 2차 북핵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지난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3차 핵실험 다음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한 핵실험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로동신문 13/02/13). 2002년 10월 켈리 방북을 통해서 확인된 북한의 무핵화 농축프로그램이 1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로 구체화 된 것이다.

북한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볼 참이다.’(마이크 치노이 2008, 240)라고 언급한 것과, 미국 6자회담 대표 켈리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이우탁 2009, 223)고 한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북핵문제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문제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을 개발하고, 미국의 개입(Intervention)에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와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이슈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북한의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미국의 국제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제정치 문제이다. 따라서, 제 2차 북핵위기와 그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총체적인 전략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개입전략(Intervention Strategy)과 전략수단을 사용했으며, 그 전략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만약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개입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대응 전략과 전략수단으로 자신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전략목표는 적절히 달성되었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이론인 패권이론, 억지이론, 세력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과 북한의 기본전략과 전략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미국과 북한의 전략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 정부의 발간 자료 및 유엔문서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중심자료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2003년 1월 북한의 NPT완전탈퇴로부터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까지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실행하였고, 북한도 이에 맞서 자신들이 설정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전략을 활용했다.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북미 전략연구는 차후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II. 미국의 북핵문제 개입전략

1. 미국의 개입전략 및 전략 메커니즘

오늘날 미국은 일극적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패권국가다. 아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볼 때, 패권국가인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이 개입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미국의 전략목표는 무엇이고, 이 전략의 이론적 배경과 전략메커니즘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더 강하고, 경쟁력 있고, 희망적인 미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면서 출범(Marc 2010, 1)한 부시행정부는 9. 11사태를 겪으면서 부시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변창구 2008, 139). 부시독

트린은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은 테러를 저지르는 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한다. 둘째, 미국은 공격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들을 국외에서 맞서 싸운다. 셋째, 미국은 자유라는 희망적인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의 사악한 이념과 대결한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길은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Marc 2010, 4). 이 부시독트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시행정부 외교의 핵심 목표는 테러범과 테러지원정권에 대한 선제공격 및 사전 제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다.

미국은 북한을 1988년부터 2008년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을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는 테러 지원정권이며, 악의 축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권이라고 선언했으며(Bush 2002/01/29) 이후, 미국은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추진했다(Rice 2012, 688).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안보리문서 S/pv.5551)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북한 핵물질 및 핵프로그램의 대외 확산 방지 그리고,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추구했다(Bush 2011, 528-529).

(2)

패권국가는 국제체계 내의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며,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정치, 경제, 안보 등의 관계를 조직하고 유지한다 (Gilpin 1981, 29-30). 그리고, 패권국가는 안정된 국제거래를 위하여 통화와 공공재를 공급하는 한편, 핵 억지력을 실행한다(McLean and McMillan 2003, 240). 미국은 이 패권에 기초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억지하고자 했다.

억지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시킴으로써,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억지가 안보영역에서 군사적 도전을 예방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군사적 배치 또는 비군사적 행위 예방 시도에도 사용되어진다(Lebow 1990, 336).

억지는 강대국 간의 억지, 국제적 안보관리에 있어서의 억지, 강대국 이외 국가들간의 억지, 국가 내 갈등에서의 억지로 나누어진다(Patrick 2003, 247). 이 중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억지는 국제적 안보관리에 있어서의 억지에 해당하는데, 국제적 안보관리에 있어서의 억지에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의 단독 억지와 NATO, OAS와 같은 지역기구 그리고, UN과 같은 세계기구에 의한 다자억지가 있다(Morgan 2003, 255-259).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6자회담도 하나의 다자억지에 해당한다(Paul and James 2009, 163-164).

억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억지자, 피억지자, 위협, 개입, 설득이 있다(Harkabi 2008, 10). 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억지자가 행위를 감히 하지 못할 정도의 가시적이고 집행가능한 수준의 위협, 피억지자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개입 그리고, 보상 및 보증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상 및 보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피억지자는 현실과 화해하거나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Lebow 2005, 765-766).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시행정부는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개입전략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단독억지와 다자억지를 모두 활용하였다. 미국이 활용한 단독억지에는 군사적 개입 위협,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금 흐름에 직접개입하는 금융제재가 있고, 다자억지에는 북한 핵 무기 및 핵 기술의 확산에 대한 PSI의 개입, 북한 핵 도발에 대한 UN안보리의 개입 그리고, 외교적 설득을 위한 6자회담이 있다. 이 중 미국은 2006년 10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그로 인한 네오콘의 퇴진, 1차 북

핵실험 이전까지는 금융제재와 같은 압박에 중점 두었고, 그 이후에는 압박보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 메커니즘

전략목표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정권교체	비핵화	비확산
↑		↑	↑	↑
개입 전략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		
전략수단		단독억지		다지역지
	군사적 방법	군사적 개입 위협		WMD PSI(확산방지구상)
	비군사적 방법	BDA 통제 및 금융제재		6자회담 및 유엔 안보리

전략수단 중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 위협과 WMD PSI는 군사적 방법에 해당하고, 금융제재와 6자회담 및 안보리 결의는 비군사적 방법에 해당한다. 미국이 활용한 전략수단을 단독억지 수단과 다지역지 수단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패권에 기초한 단독억지 전략

미국은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여 국제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변화를 거부 혹은 주도한다. 이러한 패권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억지를 실행할 수 있다(박창재 2009, 14).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억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 위협과 BDA 통제 및 금융제재를 실시하였다.

(1)

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억지자가 억지에 실패했을 때 피억지자에게 충분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때의 위협은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일으키면서도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현실화의 가능성에 대해 신뢰하여야 한다(온창일 2013, 194).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핵 무기 또는 핵 물질을 해외 특히, 테러조직에 이전하는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군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였다.

1) 미국 고위 관리들의 군사력 사용 위협 발언

미국 최고지도자 부시대통령은 2003년 2월 중국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Bush 2011, 529). 그리고, 2006년 북한이 제 1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발표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 무기 또는 핵물질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ush 06/10/09). 한편, 2006년 3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소량의 핵무기로 국제공동체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에 위협을 끼치는 폭정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종식을 다짐했다(The White House 2006, 3-19).

미국 국무부의 아미티지 차관은 2003년 2월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군사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Armitage 03/02/04).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리포트는 2004년 11월, 북한이 핵 물질을 테러집단에 판매하는 경우 북한은 세계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핵 물질 판매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은 이것을 북한군이 전면 납치하는 상황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중앙일보 04/11/20).

2)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군사위협 및 한계

이러한 고위관리들의 군사공격 위협과 함께, 미국은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미군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한국에 ‘롱보우 AH-64D’ 20여대와 최신형 미사일 ‘페트리엇 3’을 추가배치하였으며(유엔문서 S/2003/673), 2004년에는 ‘M1-A1’ 전차 수습대를 한산공군기지에 배치하였다(조선중앙년감 2005, 254). 2006년에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이지스’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핵항공모함전단을 부산항에 정박시켜 북한을 위협하였고(조선중앙년감 2007, 245), 2007년에는 ‘F-117’스텔스 전투폭격기, ‘F-15’ 전투폭격기, ‘F/A-18’ 추격습격기 등 위험한 핵선제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전개시켰다(조선중앙년감 2008, 236). 2008년에 미군은 2008년 말까지 철수하기로 되어 있던 3500명의 주한미군 병력과 ‘F-16’ 전투폭격기 대대, 헬리콥터 대대를 한국에 그대로 주둔시키기로 했다(조선중앙년감 2009, 267). 북한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한 미군의 병력 그리고, 미사일 등 육군장비, 전투기 등 공군장비, 항공모함 등 해군장비의 배치와 주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방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의 북한공격을 강력히 반대했다(유시민 2013, 122). 그리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미국의 북한 군사공격에 매우 부정적이었다(유엔안보리문서 S/pv.5490).

(2) BDA(Banco Delta Asia)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자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경제질서의 규칙을 강제하고 창출한다(Gilpin 1981, 145). 미국은 북 핵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인 애국법을 적용했다. 9.11사태이후 제정된 애국법에는 테러 및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제금융질서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특히 애국법 3장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수 상한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대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은 이 애국법 3장을 대북금융제재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1) BDA 통제 등 금융제재의 경과

BDA 금융제재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05년 9월 20일 연방정부 관보를 통하여 공식 발표되었다. 윌리엄 베이티 금융범죄조사국 차장의 명의로 발표된 재무부 고시에는 마카오 소재 BDA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특별한 조치는, 애국법 311조에 근거하여 BDA와 BDA를 대신하는 어떤 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에 계좌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거나,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Federal Register 2005/09/20, 55217-55222). 이 제재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BDA가 다양한 불법활동과 연관된 북한 정부관리 및 기업의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Federal Register 2005/09/20, 55214-55216). 이 금융제재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BDA는 북한계좌를 동결했고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콘돌리자 라이스 2012, 684).

미국 재무부는 BDA 통제와 함께 2005년 10월 21일 행정명령 13382호를 발동하여 조선광성무역회사 등 8개 북한 회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업체로 지정하고, 이 회사들과 미국인들과의 거래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 회사들의 모든 미국 내 보유자산을 동결시켰다(Treasury Gov 2005/10/21).

2) 금융제재의 효과 및 금융제재의 해제

이 금융제재로 북한지도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북한 총무역액의 35-40%를 차지하는 불법자금의 수입원이 차단되었다. 북한의 주 외화수입원은 정상적인 무역거래, 중국과 한국의 지원 그리고, 위폐, 마약, 가

짜 담배 등의 제조 밀매를 통해 획득되는 이른바 불법자금 유입이다(경향신문 06/04/04, 5면). 이 불법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그의 측근들이 사치생활을 영유하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이만(Byman and Lind 2010, 46-47)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재자 김정일이 엘리트들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에서 엘리트 관리는 막대한 경제적 혜택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자금줄이 차단된 김정일은 2006년 1월 10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경향신문 06/04/04, 1면).

북한은 BDA 금융제재로 야기된 정권 및 체제 붕괴 위기를 강공책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대북 강경책을 통한 북핵억지의 한계에 직면한 부시 2기 행정부는, 2007년 1월 베이징 북미양자회담에서,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BDA 금융제재를 해제하였다.

3. 패권에 기초한 다자역지 전략

패권국가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체제 내의 다른 국가들 및 구성원들에게 우월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다(Thanh Duong 2002, 64).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예방하고,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에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미국이 구성한 대표적인 다자 역지장치는 WMD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6자회담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신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안보리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역지 장치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1) WMD PSI() -

1) PSI의 출범 배경과 북한

2002년 12월 10일 미사일 15기를 신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페인군에 의해 나포되었고, 곧 미군에 인계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미사일 거래임을 주장하는 예멘정부의 항의를 받은 미군은 서산호를 나포 하루 만에 풀어주었다(마이크 치노이 2008, 256-258). 서산호에 이어, 2003년 4월과 5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와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소디엄 시아나이드(Sodium Cyanide)가 프랑스 및 독일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으로 가는 도중에서 차단되었다. 이와함께 2003년 5월에는 해로인을 운반하던 북한 선박 봉수호가 호주정부에 의해 나포되었다. 북한은 마약판매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획득된 외화를 핵무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특히, 외교, 정보, 법 집행과 함께 군사공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부시 행정부는 PSI구상을 완성하였다(Bolton 2003).

2) PSI의 출범과 북한 핵 기술의 확산

부시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PSI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핵, 화학, 생물학무기의 확산이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이전 및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PSI를 제안했다(Bush 2003/05/31). 이 제안은 그 다음 날 시작된 G8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져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G8공동성명'이라고 명명된 성명을 통해, G8정상들은 북한정부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된 물질 및 기술들이 이전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및 장치의 설립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G8 2003/06/03).

2003년 6월 12일 미국 등 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PSI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같은 해 9월 3일, 참가국들은 'PSI 차단원칙'에 합의했다(문병철 2012, 37).

PSI설립 배경과 G8성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PSI의 중요 목표는 북한의 핵 무기 및 핵 물질의 확산 방지이다. 미국 군축담당 차관 존 볼턴도 PSI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차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경향신문 03/09/06, 8면).

미국이 주도하는 PSI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무기 기술과 시설을 테러지원국가인 시리아에 판매한 사실이 2007년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금지선을 북한이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북한에 대해 별도의 응징을 하지 않았다(Bush 2011, 525-526).

(2) 6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역지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정부를 설득하고자 했다.

6자회담은 협의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3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탐색기로서 제 1, 2, 3차 회담이 여기에 해당하고, 제 2기는 다자합의 기로서 제 4차 회담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 3기는 북미 양자합의기로서 제 5차, 6차 회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 시기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요구사항과 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탐색기(2003년 8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미국과 북한은 세 차례 회담을 통하여 회담에 임하는 서로의 태도, 입장 그리고, 주장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세 가지 핵심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은 북한 체제를 임시로 보장해 주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증유를 공급한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북한이 모든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검증받으면, 그 시점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잠정적인 안전보장과 장기적인 에너지 지원, 경제제재의 해제 등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다. 셋째,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인권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관계는 정상화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편, 평화적 핵 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제안 수용을 거부했다.

2) 다자 합의기(2005년 7월 26일 - 2005년 9월 19일)

미국은 6자회담 개시 때부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양자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에 따라 모든 회의의 합의는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회의 참가국 대표들에게 회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가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9.19공동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이전 탐색기 기간 동안에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오던 3가지 사항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경수로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3) 양자합의기(2006년 12월 18일 - 2007년 10월 3일)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미국 행정부는 압박보다 설득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설득방식이 다자설득에서 양자설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북한이 핵실험

을 강행함으로써 압박과 다자설득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둘째,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북미양자회담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셋째, 럽스펠드를 포함한 네오콘들이 퇴장하고 그 자리를 라이스와 같은 현실 주의자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김현 2008, 144-145).

2006년 11월 말 힐은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 김계관을 만나,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미양자가 전체 6자회담 전에 중요한 합의에 먼저 도달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제시했다(마이크 치노이 2008, 516). 이후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양자 합의가 제 5차 6자회담 2.13합의의 바탕이 되었고, 2007년 9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가 10.3합의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북미 양자의 조기 합의가 회담의 효율성을 높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6자회담은 모건이 말한 조화모델(Concert model)형의 다지역지 즉, 6개 참가국들의 합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다지역지(Paul and James 2009, 163)에서, 패권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패권형 다지역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2.13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을 거부하였고, 러시아는 북미 양자조기 합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Buszynski 2009, 825).

이후 2.13합의와 10.3합의에서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오던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 인권문제 해결을 모두 포기했다. 이러한 미국의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국의 검증의무를 주장하면서 6자회담을 중단시켰다.

(3)

패권 국가인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 및 의장성명 채택을 통하여 북한의 핵 무기 개발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

국으로서 결의 및 의장성명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결의안 1540호 채택 - 북한 핵 무기 및 핵 물질 확산 방지

2003년 9월 부시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안보리는 부시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4월 28일 결의안 1540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 결의안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와 이 무기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안보리 문서 S/pv.4956). 결의안 1540은 모든 국가들에게 핵, 화학, 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통제수단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안보리결의안 S/RES/1540).

이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북한 핵무기 및 핵 물질 확산 차단 활동에 필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2)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안 1695호 채택 - 핵 무기 관련 금융자산의 이전 금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 1695호가 2006년 7월 15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정부를 향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의 획득을 중지할 것과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안보리 문서 S/pv.5490). 결의안 1695호에서 주목할 점은, 이 결의안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안보리결의안 S/RES/1695).

3) 북한 핵실험 예고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 유엔안보리의 북 핵 실험 경고

안보리는 2006년 10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보리를 대표하여 안보리 의장이 북한 핵실험 예고에 대하여 경고성명을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안보리의장은 의장성명의 전문을 전 회원국 앞에서 낭독하였으며 이 성명은 반대 의견없이 채택되었다(안보리문서 S/pv.5546). 안보리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외무성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국제공동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그 의무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보리 의장성명 S/PRST/2006/41).

4)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1718호 채택 - 핵 무기관련 물품, 금융자산, 인적교류 통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14일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어진 각 국 대표 발언 때 미국 대표는, 북한이 현재의 경로를 계속 유지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보리문서 S/pv.5551). 결의안 1718호는 북 핵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3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물품을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 둘째,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사람 및 조직 소유의 자산을 동결할 것, 셋째, 핵무기 등에 관련된 북한 정책 책임자들 및 그 가족들의 입국 또는 자국 통과를 금지할 것 등이다(안보리결의안 S/RES/17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3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1건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및 확산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개입하였다. 하지만, 미국 유엔대사 존 볼턴(미국의 소리 12/12/24)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와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지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III.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

1. 북한의 대응 전략 및 전략 메커니즘

북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패권국의 군사적, 외교적 개입을 억제할 수 없는 약소국이다. 아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볼 때, 약소국 북한은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하여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 대응전략의 목표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대응전략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6자회담이 거의 중단되어 가던 2008년 9월 5일,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3가지 외교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는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조선중앙년감 2009, 11). 북한이 6자회담기간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9.19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볼 때, 북한이 달성하고자 했던 전략목표는 ‘체제 및 정권유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한겨레신문 07/07/05; 로동신문 07/11/25), 자주통일에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와함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지속함으로써 경수로 및 핵 무기 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2)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 북한과 같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은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 위협국가에 대해 ‘균형’을 취하든지, 아니면 강대국에 굴복하여 강대국에 ‘편승’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한다(장노순 1999, 379-380). 월츠(Waltz 1979, 117-119)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이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은 편승보다 균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들은 내적 노력과 외적 노력을 하게 되는데, 내적 노력에는 경제력 및 군사력 향상 그리고 재치있는 전략개발이 있고, 외적 노력에는 동맹 강화 및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의 약화시도가 있다. 동맹이 결성되어 안정이 유지되는 상태가 세력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세력균형을 위한 외적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황영배 1996, 333-336). 하지만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이 미국이라는 단일 패권국 등장 이후 더 이상 설명의 틀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폴(Paul 2005, 46-59)과 페이프(Pape 2005, 7-18)는 세력균형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확장된 균형 개념으로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을 제시한다. 즉, 오늘날 세계 국가들은, 이전에 강조되었던 동맹형성 및 군사력 강화와 같은 경성균형과 함께, 비군사적 수단인 국제기구, 외교협약, 경제운영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자원활용과 같은 연성균형을 통하여 미국의 패권과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 및 외교관계가 군사동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간의 동맹 및 외교관계유지를 경성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균형전략을 수용하면서, 자주를 균형전략의 현실적용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자주는 주체사상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대외노선에

입각한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서, 모든 외부세력이 북한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북한의 실정과 이익에 맞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외교활동을 펴 나간다는 것이다(김일성 1987, 365). 그리고,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총에는 대포로 대하는 방식을 자주적인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한다(로동신문 08/12/26). 이러한 자주 원칙과 자주적인 대응방식은 외교 현실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북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 여기에는 동맹국 중국도 포함된다. 둘째는 북한의 정권 및 체제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와 대결을 적절히 활용한다.

(3)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에 대하여 ‘자주에 기초한 세력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이 대응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자주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경성균형 수단으로 내부 군사력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를 추구하였고, 연성균형 수단으로는 내부단결 강화와 6자회담 및 유엔외교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대응전략 메커니즘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의 미국 개입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 메커니즘

전략목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자주통일 기반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대미관계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협력	체제 및 정권 유지
↑	↑	↑	↑
기본전략	자주에 기초한 세력균형 전략		
전략수단	내적 노력	경성균형 군사력 강화	연성균형 내부단결강화
	외적 노력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유지	6자회담 및 유엔외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력 강화와 내부단결강화는 월츠가 구분한 내적 노력에 해당하고,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6자회담 및 유엔외교는 외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활용한 전략수단을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주에 기초한 경성균형 전략

(1)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제 및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6자회담에서 북한대표가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은,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라고 강조하면서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 부었다(로동신문 03/01/01).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국가예산 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군사비는 2004년 대비 31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군사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율의 7배에 달한다(통일연구원 2009, 235). 이는 사탕 없이는 살아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군사선행 경제건설 원칙(김정일 2007, 7)이 집행된 결과이다.

한편,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의,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김정일의 최우선 관심사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재홍 2011, 194-195). 이러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지원 하에 북한은 전략무기인 미사일의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북한의 미사일은 3가지 용도를 가진다. 첫째, 한국, 일본, 괌 등을 사정권 안에 들이로서 외부공격을 억제한다. 둘째, 제 2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미사일 수출을 통하여 경화를 획득한다(이우탁 2009, 279). 셋째, 미사일 시험발사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다. 이 3가지 용도에서

미사일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 향상 및 실전배치가 필수적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여 2007년 궤를 사정권 안에 두는 중거리미사일을 평안남도과 함경북도 미사일 기지에 14-50기 실전배치하였고(유용원 등 2013, 141-142), 2006년 7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6월 27일 고체연료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첨단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조선일보 07/07/03). 한편, 북한은 2006년 7월 4일 미국의 BDA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2)

북한과 중국은 군사협력조약을 맺고 있는 군사동맹국이다. 이 군사협력 조약에 따라 북한이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중국은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 북중동맹에 대한 김정일의 기본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NPT 완전탈퇴를 선언한 직후인 2003년 3월 16일, 후진타오와 장쩌민에게 보낸 취임 축하 전문(로동신문 03/03/16)이다. 이 전문에서 김정일은 종합적 국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고,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이 많이 향상(로동신문 03/10/01)된 중국과 북한이 동맹 및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북한에게 있어 중국과의 동맹은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북중동맹관련 언급과 부총리급 이상 고위인사의 중국방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김정일의 북중동맹관련 언급 및 북한 고위인사의 중국방문

년도	김정일의 북중동맹 관련 언급	북한 고위인사의 중국방문
2003	조중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관계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
2004	조중관계의 기초가 반석같이 든든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05	조중친선을 변함없이 공고발전 시킬 것	박봉주 내각총리/로두철 내각부총리
2006	조중친선 강화발전은 우리 당의 입장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2007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 확신	
2008	조중친선협조 공고발전은 일관된 입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출처 : 김정일의 언급은 『로동신문』(03/03/16, 04/04/23, 05/10/01, 06/10/01, 07/10/23, 08/10/01), 고위인사 중국방문은 『조선중앙년감(2004-2009)』.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은 매년 북중동맹의 중요성을 중국정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인사들이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지도자들과 북중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2006년 2월 중국은행(BOC)을 통해 북한관계계좌를 동결시킴으로써(조선일보 06/07/25)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동참했을 때, 북한은 중국에 강력히 대응했다.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김일성이 1972년 4월 15일 발표한 노작 ‘혁명적 단결은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를 로동신문 1면에 게재했다. 이 노작에는,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유훈이 담겨있다(로동신문 06/04/15). 이 사설 발표 이후부터 2008년 말까지 북한은 2차 북 핵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06년 4월부터 2008년 말까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김영남의 방중은 중국 올림픽경기 개막행사 참여가 주 목적이었다(조선중앙년감 2009, 258).

그리고,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때 중국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중국정부가 ‘북핵실험은 잘못된 행동’으로써,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마이크 치노이 2008, 485)라고 경고하는 것도 무

시한 채,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계관이 '지난 6년간 중국에 의지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조선일보 07/03/09).

3. 자주에 기초한 연성균형 전략

(1)

김정일(2007, 2-3)은 내부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이자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라고 강조한다. 즉, 전체인민이 하나로 단결하여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를 때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단결을 확립하기 위하여 북한은 3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첫 번째는 군중대회이고 두 번째는 위기의 지속적 유지이며 세 번째는 로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을 통한 주민들의 주기적 학습이다. 먼저 군중대회는 정기대회와 비정기대회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정기대회에는 '신년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와 '6.25미제 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있다. 이 두 대회는 1월 2일과 6월 25일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각 시군 및 기업소, 학교에서 행해지며 모든 주민이 참여한다. 비정기대회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되는데, 북한의 NPT완전탈퇴와 관련하여 개최된 군중대회 즉, '공화국 정부성명을 지지하는 군중대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중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군중심리에 빠지게 되고(주성하 2012, 24) 평소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정부주장을 따르게 되며, 자신이 거대한 조직의 하나임을 체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단결을 강화한다. 이러한 위기상황 강조는 국가 기념행사 보고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9월 9일 국가 창건 경축보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가 창건기념일 경축보고 보고서 및 위기강조 내용(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고자	총참모장	내각총리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내각총리
위기표현	군열병식 진행	“전쟁집경”	“대결전”	“압살기도”	“엄중한 난관”	“긴장된 정세”

출처 : 『로동신문』, 2003-20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
(9월 9일)(2003년은 9월 10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창건 기념 경축보고에서 보고서들은, 연설을 통해 현재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으로 인해 전쟁직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민들에게 강조한다.

세 번째는 로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을 통해 내부단결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학습시킨다. 북한주민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30분 동안 독보회를 가진다. 이 시간에 사설과 정론을 함께 읽는데, 이 사설과 정론에 내부단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 함으로서 주민들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매년 약 5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학습시키는 사설과 정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이 강조하는 단결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단결은 역사성에 근거한다. 즉, 북한의 단결은 항일의 불길 속에 마련된 전통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로동신문 06/05/05). 둘째 수령과 대중사이의 수직적인 단결이 단결의 근원이다. 수령은 인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고, 대중은 수령에게 목숨으로 보답하는 것이 단결을 이루는 기초다(로동신문 05/07/24). 셋째는 군대와 인민 사이의 수평적 단결을 권장한다. 김정일은 군민일치의 모범사례에 수시로 감사를 보냄으로써 군인과 주민들에게 군민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로동신문 07/11/12).

(2) 6

북한입장에서 6자회담은 동맹국 중국이 주관하는 연성균형의 장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양보하는 대가로 다른 참여국들의 보증 하에, 북미간 평화공존 확인을 통한 체제 및 정권유지, 평화체제로

의 전환을 통한 자주통일 기반구축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통한 강성대국의 기틀마련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나라 농축프로그램을 지켜내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과의 적절한 협력 그리고, 자주적 대응에 바탕을 둔 일관된 목표 추구라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1) 동맹국 중국과의 적절한 협력

북한은 6자회담에서 동맹국인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다. 사실,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은, 미국에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양자회담 만을 고집했다(로동신문 03/02/08). 하지만, 북한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받은 후 입장을 바꾸어 6자회담에 참여했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북한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협의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6자회담 관련 북중 협의 당사자 및 협의 내용

날짜	협의 당사자		구체적 협의 내용
	북한	중국	
2003.10.30	김정일	오방국(국가대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 실현
2003.12.27	강석주	왕의	2차 6자회담의 빠른 시일 내 개최의사 공유
2004.04.19	김정일	후진타오	6자회담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논의
2005.02.21	김정일	왕가서(구두친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
2005.07.13	김정일	당가선(특사)	4차 6자회담 대비 북중 협상전략 논의
2006.01.10	김정일	후진타오	미국 금융제재 해결 협력 요청 및 중국의 수용

출처 : 『로동신문』 03/10/31, 03/12/28, 04/04/23, 05/02/22, 05/07/14, 06/01/19.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2월 중국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6자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 북중 최고지도자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북한에서 6자회담 및 북

핵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주적 대응에 바탕을 둔 일관된 목표추구

6자회담과 같은 국가 간 협상을, 무력에 기초한 총포소리 없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장용순 2007, 119)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대결을 적절히 활용하는 자주적 대응을 하였다.

북한이 자주적 대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북미관계 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협력, 체제 및 정권유지였다. 이 3가지 목표는 매 6자회담에서 북한대표에 의해 일관되게 주장되었고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모두 포함되었다.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협상하기 위한 포럼 구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2.13합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2.13합의와 10.3합의의 에너지 및 경제협력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현재, 일본 몫을 제외한 중유 80만 톤 상당의 에너지 및 물자가 북한의 핵 동결과 신고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되었다. 한편, 경제협력의 장애가 되는 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모두 해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6자회담기간에 대결을 수시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2005년 5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과 2008년 9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동결된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대결적 자세를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에 필요한 명분과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보유주장은 미국의 자작날조품이며 신빙성이 없는 허구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로동신문 04/05/31).

(3)

유엔은 전 세계 192개국이 참여하는 주요 외교활동의 무대이다. 북한은 이 외교무대를 활용하여 북한이 현재 미국에 의해 주권을 위협당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공격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2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유엔총회에서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리와 총회에 공식문헌을 제출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대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유엔총회 전체회의 그리고, 정치 군사문제를 다루는 제 1위원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 대표의 주요 발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유엔총회 북한 대표의 북핵관련 주요 발언(2003-2008)

	날짜	회의	북한 대표의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발언
58차 유엔총회	2003.09.30	전체회의	미국의 고립압살 및 적대시정책의 결과
	2003.10.14	1 위원회	핵 초강대국의 끊임없는 압살위협을 받음
59차 유엔총회	2004.09.27	전체회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2004.10.12	1 위원회	미국이 북한을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
60차 유엔총회	2005.09.22	전체회의	북미관계 개선 및 위협 제거시 핵무기 불필요
	2005.10.07	1 위원회	미국의 대북 핵위협으로 인해 북핵문제 발생
61차 유엔총회	2006.09.26	전체회의	미국의 금융제재 발동으로 6자회담 파탄
	2006.10.09	1 위원회	미국이 금융제재의 압박을 여러각도로 증대
62차 유엔총회	2007.10.02	전체회의	북미적대관계 지속,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
	2007.10.15	1 위원회	적대시정책 종식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구
63차 유엔총회	2008.09.27	전체회의	김정은 6자회담 모든 참가자가 받아야 할 의무
	2008.10.13	1 위원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

출처 :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사

북한대표의 유엔총회 주요 발언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약소국가인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둘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셋째,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주권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북한 핵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서를 제출하여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북한이 제출한 공식문서의 내용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현실적이고 무시무시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유엔문서 S/2003/673). 둘째,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전협정을 위반해 가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최신형 무기와 운영장비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유엔문서 S/2004/592). 그리고, 미국이 PSI를 북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 15조 봉쇄금지 조항 위반이다(유엔문서 A/60/689). 셋째, 유엔안보리는 북핵문제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즉, 유엔안보리는 현재,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에 대처하여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유엔문서 S/2007/434). 약소국의 권리를 강조하는 북한의 주장을 통해서 볼 때, 유엔 외교활동의 주 목표 대상은 미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불럭불가담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개입전략 분석을 통하여,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전략수단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지도부의 미국 전략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방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일 정권은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테러지원국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협 국가로 간주하였으며,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위협한 국가가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다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국의 주요 대외전략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무기의 비확산, 폐기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소멸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구사하였다. 2006년 10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까지,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의 확대와 BDA제재 등 압박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이후에는 BDA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시리아에 핵 확산을 한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설득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렇게 부시행정부가 압박과 설득을 적절히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북핵문제와 관련된 전략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국가 지정, 군사공격 위협, 서산호 나포 및 PSI를 통한 해상봉쇄, BDA제재를 통한 금융통제,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를 김정일 정권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약소국가인 북한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동맹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2006년 2월 중국이 미국의 BDA제재에 동참한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대외노선인 자주적인 방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는 내부단결의 강화와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및 10월 1차 핵실험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부시행정부의 개입전략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체제 및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고, 국내적으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고 비용을 초

래하는 선군정치를 기치로, 핵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적 한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참고문헌

1. 북한문헌

[1] 단행본

- 김일성(Kim, ilseong). 1987. 『김일성 저작집 35』(Kim Ilseong Jeojakjip35). 평양(Pyeongyang): 조선로동당출판사(Joseon Nodongdang Chulpansa)
- 김정일(Kim, Jeongil). 2007. 『김정일선집 15』(Kim Jeongil Sunjip15) 평양(Pyeongyang): 조선로동당출판사(Joseon Nodongdang Chulpansa).
- 조선중앙통신사(Joseon Joungang Tongsinsa). 2004-2009. 『조선중앙년감(2004-2009)』(Joseon Jungang Nyeongam). 평양(Pyeongyang): 조선중앙통신사(Joseon Jungang Tongsinsa).

[2] 신문

- 공동사설(Gongdong Saseol).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자.”(Widaehan Sungunkichi Ddara Gonghwaguk-ui Joneom-gwa Wiryeok-ul therchija) 『로동신문』(Rodong Sinmun) (1월 1일)
- 김일성(Kim, Ilseong). 2006. “혁명적 단결은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Hyukmyeongjeok Dangeol-eun Moden Seungni-ui Damboida) 『로동신문』(Rodong Sinmun) (4월 15일)
- 김중손(Kim, Jongson). 2004. “거짓과 모략은 통할 수 없다.”(Geojitgwa Moryak-eun Tonghalsu Eopda) 『로동신문』(Rodong Sinmun) (5월 31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Widaehan Lyeongdoj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guk Gukga Daepyodan-ul Jeopgyeon Hasiyeo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10월 31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Widaehan Lyeongdoj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guk Kongsandang Jungang Gunsawiwonhoe Jusak-ege Chukjeon-

- ul Bonae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3월 16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200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 당 국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gukdang Gukgajidojadeul-age Chukjeon-ul Bonae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10월 1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Widaehan Lyeongdpj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angwiwonhoe chongseoki-in Junghwainmingonghwaguk Jusuk-ege Chukjeon-ui Bonae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3월 16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특사를 접견하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hwainmin Gonghwaguk Jungbu tteuksa-ul Jupkyun Ha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7월 15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13. “제 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Je 3-cha Jiha Haeksi Heom-ul Songgongjeok-euro Jinhaeng) 『로동신문』(Rodong Sinmun) (2월 13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Joseon Minjujuul Inmingonghwaguk Oemusung Daebyeongin Daedap) 『로동신문』(Rodong Sinmun) (12월 28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hwainmingonghwaguk-ul Bi-kongsik Bangmunha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4월 23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을 접견하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guk Gongsandang Jungangwiwonhoe Daecoeryeonrak Bujang-ul

- Jupkyun ttesa-ul Hasiyeo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2월 22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동지의 특별대표를 접견하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hwainmin Gonghwaguk Jusuk Hogeumdo Dongji-ui teukbyeol Daepyo-leul Jupkyun ttesa-ul Hasiyeo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7월 14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6. “우리 조국은 영원히 단결의 위력으로 번영할 것이다.”(Uri Joguk-eun Yeongwonhi Dangyeol-ul Wiryeok-euro Beonyoungchal geosida) 『로동신문』(Rodong Sinmun) (5월 5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였다.”(Widaehan Lyeongdosa Kimjeongil Dongji-kkaeseo Junghwainmin Gonghwaguk-ul Bigongsik Bangmum Hasiyeotsda) 『로동신문』(Rodong Sinmun) (1월 19일)
- 로동신문(Rodong Sinmun). 2007.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Joseoninmin Choeko Salyeongwan Kimjeongil Dongji-kkaeseo Kunminilchi-ui Juntongjeok Mipung-ul Noppbi Balyanghan ilgundeulgwa Geunrojabeul-aegae Kamsa-reul Bonaesiyetda) 『로동신문』(Rodong Sinmun) (11월 12일)
- 리기봉(Ri, Kibong), 전용혁(Jeon, Younghyak). 2005.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 군민의 충성으로 결합.”(Lyeongdoja-ui Mideum-gwa Sarang, Gunmin-ui Chungsung-euro Gyeolhap) 『로동신문』(Rodong Sinmun) (7월 24일)
- 리현도(Ree, Hyundo). 2008.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군사적 광증.”(Joseonbando-e Junjeong-ui bulgureum-ul Molaon Gunsajeok Gwangjeung) 『로동신문』(Rodong Sinmun) (12월 26일)
- 백문규(Baek, Mungyu). 2003. “다자회담에는 흥미가 없다.”(Daja Hoedam-eonun Heungmiga Eopda) 『로동신문』(Rodong Sinmun) (2월 8일)
- _____. 2007. “조선반도 평화보장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Joseonbando

Pyunghwabojang-eun Sidae-ui Jeolbakhhan Yogu) 『로동신문』(Rodong Sinmun)
(11월 25일)

2. 국내 문헌

[1] 단행본

- 고재홍(Ko, Jaehong). 2011. 『김정일 체재의 북한군 연구』(Kim Jeongil Chejae-ui Bukhangun Yeongu). 서울(Seoul): 국가안보전략연구소(Kukga Anbo Jeonrak Yeonguso)
- 김계동(Kim, Gye-dong). 2012.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Bukhan-ui Oegyo Jeongchaek-gwa Daeoe Gwangyo). 서울(Seoul): 명인출판사(Myungin Chulpansa)
- 마이크 치노이 (Chinoy, Mike). 박성준, 홍성걸 역(Translated by Park Sungjun and Hong Sunggeol). 2008. 『북핵 롤러코스터』(Bukheak Roller Coaster). 서울(Seoul): 시사인북(Sisa in Book).
- 박창재(Park, Changjae). 2009. 『미국패권연구』(Miguk Paekwon Yeongu). 서울(Seoul): 인간사랑(Ingan Sarang)
- 변창구(Byun Changku). 2008.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Saegyehwa Sidae-ui Gukjaegwangae). 서울(Seoul): 대왕사(Daewangsa).
- 온창일(On Changil). 2013. 『전략론』(Jeonrakron). 서울(Seoul): 지문당(Jimundang).
- 유시민(Yu, Simin). 2013.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Roh Mu-Hyun Kim Jeongil-ui 246bun). 서울(Seoul): 돌베개(Dolbaegae).
- 유용원(Yu, Yongwon) 2013.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Bukhangun Secret Report). 서울(Seoul): 플래닛미디어(Planet Media).
- 이우탁(Lee, Woo-tak). 2009.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Obama-wa Kim Jeongil-ui Sengzongame). 서울(Seoul): 창해(Changhae)
- 조지 W. 부시 저(Bush, George Walker), 안진환, 구계원 역(Translated by Ahn Jinhwan and Ku Gyewon), 2011. 『결정의 순간』(GyeolJung-ui Sungan). 서울(Seoul): YBM Si-sa.

주성하(Joo, Sungha). 2012.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Kim Jungeun-ui Bukhan, Eodiro Gana). 서울(Seoul): 기파랑(Kiparang).

콘돌리자 라이스 저(Rice, Condoleezza), 정윤미 역(Translated by Jeong Yunmi) 2012. 『최고의 영예』(Choiko-ui Youngye). 서울(Seoul): 진성북스(Jinsung Books)

[2] 논문

김현(Kim, Hyun). 2008.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Bush HaengJungbu-ui Oegyojeongchakenyeom-gwa Daebukhan Jeongchaek) 『국가전략』(Kukga Jeonlak) 14(1): 123-152.

문병철(Mun, Byeongcheol). 2012. “제2차 북핵위기와 미국 패권의 능력 그리고 한계.” (Jae2Cha Bukhakwiki-wa Mikuk Paegwan-ui Neunglyeok Georiko Hangaе) 『한국과 국제정치』(Hanguk-hwa Gukjae Jungchi) 28(2): 29-52.

장노순(Jang, Nohsun). 1999.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 외교정책.” (Yaksoguk-ui Galdeungjeok Pyunseung Oegyo Jungchaek) 『한국정치학회보』(Hanguk Jungchihak Hoebo) 33(1): 379-397.

장용순(Jang, Yongsun). 2007. “미국견제, 중국 안타깝게 만들고 남조선은 주무른다.” (Miguk Gyeonjae, Jungkuk Antakkamgae Mandelko Namjoseon-eun Jumureunda) 『월간중앙』(Wolgan Joogang)

황영배(Hwang, Youngbae). 1996. “군사동맹의 지속성: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Gunsa Dongmang-ui Jisoksung: Saelyukgyunhyungrongwa Saelyukjeoneron) 『한국정치학회보』(Hankuk Jeongchihak Hoebo) 29(3): 333-358

함형필(Ham, hyeongpil). 2012. “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PSI-ui Gukjaedonghyang-gwa Hanguk-ui Hwalyong BangHyang) 『국방정책연구』(Gukbang Jungjaek Yeongu) 28(2): 169-203.

[3] 신문

김민석(Kim, Minseok). 2004. “주한미군 사령관 북, 테러집단에 플라토늄 필수도.” (Juhan

- Migun Saryanggwan Buk, Tereojipdan-e Platonum Palsudo) 『중앙일보』
(joongang ilbo) (11월 20일)
- 박승준(Park Seungjun). 2007. “북 김계관 미는 중에 기대말라.”(Buk Kimgyehwan Minun
Jonge Kidaemalra) 『조선일보』(Chosun ilbo) (3월 9일)
- 유신모(Yu, Sinmo). 2003. “北 핵개발 프로그램 가장 우려되는 사안.”(Buk Haekgaebal
Program Gajang Wooryeodeonun Saan) 『경향신문』(Kyunghyang Sinmun) (9월 6
일)
- 유용원(Yu Yongwon). 2007. “방위비 한국이 50% 분담 희망 안되면 미군 재배치 조정.”
(Bangwibi Hanguk-e 50% bundam Heemang Andeomyun Migun Jaebaechi
Jojung) 『조선일보』(Chosun ilbo) (7월 3일)
- 이하원(Lee, Hawon). 2006. “중국은행 북계좌 동결 그래서 북중 사이 틀어졌다.”(Jungguk
Eunheng Bukgyejwa Dongkyul Geuraeseo Bukjung Sai teuleojujeotna) 『조선일보』
(7월 25일)
- 정동식(Jung, Dongsik). 2004. “미금융제재로 붕괴 위험, 김정일 중 후진타오에 하소연.”
(Mikeumyoungjejaero Bunggoe Wihum, Kim Jungil Jung Hwojintao-e Hasoyun)
『경향신문』(Kyunghyang Sinmun) (4월 4일)
- 차세현(Cha, Seahyun). 2006. “미, 북돈줄 ‘전방위 봉쇄’ 나서나.”(Mi, Bukdonjul
Jeonbangwi Bongsoae Naseona) 『경향신문』(Kyunghyang Sinmun) (4월 4일)

3. 외국 문헌

[1] 단행본

- Iain McLean and Alistair McMillan, ed. 2003.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 Hill.
- Marc A, Thiessen. 2010. A Charge Kept, *The Record of The Bush Presidency 2001-2009*.
Washington: The White House.
- Morgan, Patrick M. 2003.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 T. V., Morgan, Patrick M and Witz, James J. ed. 2009.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ong, Thanh, 2002. *Hegemonic Globalisation*. Hampshire: Ashgate.
- The White House, 200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The White House.
- Harkabi, Yehoshafat, 2008.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 논문

- Byman, Daniel and Lind, Jennifer. 2010.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35(1): 44-74.
- Buszynski, Leszek, 2009. "Russia and North Korea: Dilemmas and Interests." *Asian Survey* 49(5): 809-830.
- Lebow, Richard Ned, 2005. "Deterrence: Then and Now."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8(5): 765-787.
- Lebow, Richard Ned and Stein, Janice Gross, 1990. "Deterrence: The Elusive Dependent Variable." *World Politics* 42(3): 336-369.
- Pape, Robert A 2005.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30(1): 7-45.
- Paul, T.V. 2005.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30(1): 46-71.

4. 인터넷 자료

- 손원제(Sun Wonjae). 2007. "북 한성렬 '한반도 비핵화, 미군철수 필요.'" (Buk Hanjungryol Hanbando BiHaekHwa Migun Cheolsu Pilyo)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20629.html> (검색일: 2013. 12. 28)

- 유미정(Yoo, Mijung). 2012. “볼튼 전 대사 “안보리 제재, 북한 문제 해결책 안돼””(Bolten jun Miguk Daesa Anbori Jeajae Bukhan Munjae Haegyolchaek Andeo) 『미국의 소리』(Miguk-ui Sori) (12월 24일)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571122.html> (검색일 : 2014. 1. 14)
- 2003.5.31.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People of Poland.”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31-3.html> (검색일: 2013. 12. 22)
- 2003.6.3. “Non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 G8 Declaration.”http://www.g8.fr/evian/english/navigation/2003_g8_summit/summit_documents/non_proliferation_of_weapons_of_mass_destruction_-_a_g8_declaration.html (검색일: 2013. 12. 22)
- 2005.10.21.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s2984.aspx> (검색일: 2013. 12. 21)
- 2005.9.20. “Federal Register Vol.70, No.181 September 20, 2005/ Proposed Rules”, www.fincen.gov/statutes_regs/frn/pdf/section311bda.pdf (검색일: 2013. 12. 18)
- 2003.2.4. “Richard L. Armitage, Deputy Secretary of State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ttp://2001-2009.state.gov/s/d/former/armitage/remarks/17170.html> (검색일: 2013.12.15)
- John R. Bolton. 2003. “U.S. Efforts to Stop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ttp://2001-2009.state.gov/t/us/rm/21247.htm> (검색일: 2013. 12. 23)
- 2006.10.9. “President Bush’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6/10/20061009.html> (검색일: 2013. 12. 16)
- 2002.1.29.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1>

/20020129-11.html (검색일: 2013. 12. 10)

5. 유엔문헌

유엔문서 A/60/689

S/2003/673 S/2004/592 S/2007/434

유엔안보리 문서 S/pv.4956 S/pv.5490 S/pv.5546 S/pv.5551

유엔안보리 결의안 S/RES/1540 S/RES/1695 S/RES/1718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S/PRST/2006/41

ABSTRACT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U.S and the Response Strategy of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 During Six Party Talks

Lim, Sang So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 and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academical explanation, I drew some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Hegemony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Power balance theory. As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 found out that Bush administration utilized th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hegemony power, while Kim Jung-il regime used the Power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help diplomacy.

Keywords North Korea Nuclear Issue, Six-party talks, BDA, PSI